

광주·전남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재판

검찰, 6·13지방선거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이승옥 강진군수 기소
광산구청장·함평군수·나주시장은 재판 중...11명은 '혐의없음'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가 추가로 재판정에 선다. 앞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운행 함평군수는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했으며,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6·13 지방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9명(교육감 포함) 중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및 관내 지청(목포, 장흥, 순천, 해남)은 “제7회 6·13 전국동시지

방선거 사범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총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구속 11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자치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포함) 당선자 16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 재판이 끝난 자치단체장은 광산구청장과 함평군수 등 2명이며, 각각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자치단체장은 나주시장 1명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기부행위와 부정경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흡입하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운행 함평군수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정경선운동 혐의로 광주지법서 재판중이다.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두석 장성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గు곤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도·군의원은 총 22명이다.

각 의회(지역)별로 ▲반재선(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기획참여 등) 광주시의원 ▲

곽태수(부정경선운동)·강정희(사전선거운동)·이현창(기부행위) 전남도의원 ▲김영순(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광주북구의원 ▲이광석(선거비용초과지출) 나주시의원 ▲박용(허위사실공표)·최홍림(허위사실공표) 목포시의원 ▲허유인(선거당일 투표소 출입)·남정옥(기부행위)·박용운(선거인 매수)·정홍준(문자메시지 탈법 전송 등) 순천시의원 ▲고희권(기부행위)·김승호(기부행위) 여수시의원 ▲이정옥(기부행위) 담양군의원 ▲정경임(기부행위 등)·정현웅(기부행위 등) 함평군의원 ▲김명희(기부행위·벌금 70만원 확정) 장흥군의원 ▲강복수(선거당일 선거운동)·김경열(선거당일 선거운동) 보성군의원 ▲민경매(허위사실공표) 해남군의원 ▲김재홍(허위회계보고) 완도군의원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 내년 1월 7일 광주서 재판

‘사자명예훼손’ 혐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특례규정이 담긴 하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공판개정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그리고 판결선고 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지만,

전씨의 경우 고령인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연이어 제기해 7개월 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다.

전씨는 이어 지난 9월 21일 또한번 광주고법에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전씨측은 이번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지난날 30일 최종 기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뒤바뀐 합격자 발표...뒤늦게 정정

학생·학부모 항의 빚발

조선대가 수십 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발표했다가 정정해 학생, 학부모 등의 항의가 빚발치고 있다.

조선대는 13일 오전 2019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3591명, 예비순위자 5801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8명은 실제 불합격자인데도 합격자로 발표했다. 반대로 78명은 합격했는데도 불합격자로 발표된 셈이다.

조선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오류를 정정해 3591명을 다시 발표했다.

대학 측은 오류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개별 통보하고 사죄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은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조선대 수시에서는 3707명 모집에 1만6041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지역 중견업체 삼능건설 최종 파산 처리

광주·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처리 됐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자로 삼능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삼능건설은 1959년 설립된 이후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위

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돼 2009년 4월 부도 처리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2009년 5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나 M&A 실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의 담보 제공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악화, 해외 재산 매각 실패 등으로 결국 파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 공수부대 출신이야” 술집 행패 60대, 경찰에 맥주병 휘둘러



○...자신을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6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0)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출동한 경찰을

굴을 한차례 때렸다는 것.

○...동종 전과 4범인 박씨는 이날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다”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하위법관 5명도

광주 변호사들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강동혁(45·연수원 31기) 광주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4·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류종명(45·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남준(41·연수원 30기) 형사4단독 부장판사 ▲임주혁(43·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판사 ▲최두호(41·연수원 32기)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최현정(40·연수원 36기) 장흥지원 민사1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공정·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발언 기회와 입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5명은 판결문에 양형사유조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소송당사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판결문의 전문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원 495명 중 236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33명을 대상으로 했다.

법관 평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3.36점으로 지난해 85.5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구체적 사례를 볼 때 재판 진행이 향상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 시작 50일 지나 첫 월급...그것도 한달치만 받았어요”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 들어보니

월급 못 받아 노동청 신고하자
기속사 현관 비밀번호 바꿔
직장 선택 자유 등 법 개정 필요

“일을 시작한 지 50일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한달치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20일치 임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다고 사장님이 쉬라고 했습니다. 쉬 날 만큼 월급을 적게 줬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일 오후 광주시청에 모인 이주 노동자

들은 그동안 직장에서 당했던 부당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주민중의집·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지원 연합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하기에 앞서 마련한 설립 준비 토론회이다.

광주민중의집에서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임오용씨는 사례발표회에 나서 “미얀마 근로자 A씨가 월급을 2달 반 동안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임금을 주기는커녕 기속사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말했다.

또 “5년 간 일을 하기로 했던 B씨는 4년

만에 사업장이 부도가 나며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직장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이 동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해야 하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광주민중의집에 접수된 상담 현황은 임금미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38건, 산재 10건, 사업장 변경 9건 순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